

최영명 부장

1993년 12월 15일 UR¹⁾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이후 언론은 GR, TR, BR, CR 등 R자로 끝나는 단어들로 홍수를 이루고 있다.

UR의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새로운 R(라운드)에 또 대응해야 한다는 사실은 언론에게는 사뭇 좋은 기사거리가 되고 남을만 하다.

아직 구체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단지 어디에서 논의만 되었던 것을 가지고 무슨 라운드라고 이름 붙여 국민에게 소개하는 것은 국민의 관심을 불러 일으켜 미리 대응하게 한다는 면에서 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생각되나 구체적인 내용과 실체를 잘못 전달하여 국민의 피해의식만 증폭시킬 우려도 적지 않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길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전달하는 일일 것이다. 이 특

국제규범으로서의 GR

배출물 규제 통한 地球환경保全 통제수단으로

최영명
한국 원자력연구소 정책연구부장

집은 이러한 의도에서 기획된 것이다.

UR 이후 국제규범의 흐름

UR의 뒤를 이어 논의될 국제규범의 주요 의제로 현재 거론되고 있는 분야는 환경정책, 기술정책, 노동정책, 경쟁정책 투자정책 등 5개 분야이다.

1993년 7월 미국 무역통상대표부는 UR의 뒤를 이을 새로운 라운드를 제안한다고 발표하고, 이 라운드에는 위의 5개 분야를 의제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를 5개 분야는 그림 1과 같이 국제교역의 흐름에 따른 상품 또는 서비스의 수명주기와 연관시켜 볼 수 있다.

상품 또는 서비스가 어느 한 나라에

서 창출되어(생산단계), '국경'을 넘어 (국제이동단계), 다른 나라의 시장에서 팔리게 되면(판매단계), 이는 국제 교역의 흐름과 일치하게 된다.

1993년 타결된 UR은 국제이동단계에 관한 규범을 제정하여 국제간 이동을 자유롭게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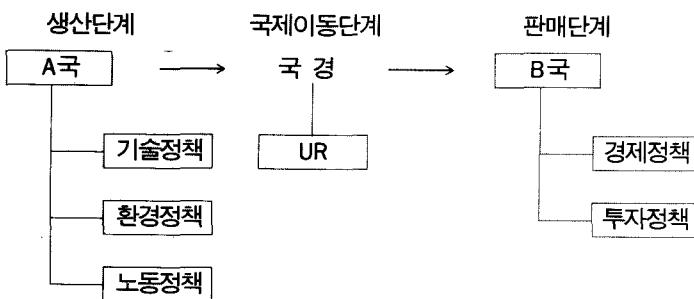
UR이 타결된 이후 논의의 대상이 생산단계나 판매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생산단계에서의 규범 논의는 "생산자는 정부 등 외부의 도움 없이 자기 기술에 의하여 만들어야 하고(기술정책),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며(노동정책), 환경적으로 유해하지 않은 형태로 생산하여야 한다(환경정책)"는 논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한편 판매단계에서의 규범 논의로 "국경을 통과한 상품이 현지 시장에서

1) UR(우루과이 라운드)에 대해서는 '원자력산업' 1994년 3월호에 '우루과이 라운드와 원자력'이라는 특집을 실은 바 있다. UR에 대해서는 3월호를 참조하기 바란다.

〈특집 I〉 : 「그린라운드」와 原子力

그림 1 : 상품 서비스의 수명주기와 국제 교역의 흐름



국내제품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어야 하며(경쟁정책), 나아가 현지에서 직접 생산판매하기를 원할 경우 투자에 관한 규제가 철폐되어야 한다(투자정책)"는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

1994년 4월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열린 UR 각료회의에서 선진 각국은 대표연설을 통해 환경정책, 노동정책 및 경쟁정책과 무역의 관계를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하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GR : 환경과 무역문제

이 특집은 위의 5개 분야중 환경정책에 관한 것이다.

그린라운드(GR : Green Round)란, 아직 실체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만, 환경문제와 무역을 연계시켜 새로운 국제무역질서를 수립하려는 다자간 무역협상을 말한다. 다른 나라

에서는 '세계환경정치(Global Environmental Politics)'라는 표현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원래 GR이란 말은 미국 상원의 무역소위원회 소속인 막스 보커스 상원 의원이 1991년 10월 워싱턴에 있는 국제경제연구소에서 행한 연설에서 "각국이 서로 다른 환경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생산비용의 차이가 국제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무역에선 환경기준 준수비용이 감안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등 환경문제를 고려한 새로운 다자간 국제무역질서 즉, GR을 출범시켜야 한다"라고 한데서 처음 사용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3년 12월의 UR 타결 이후 선진국들에 의한 국제적 통상압력이 환경규제를 통해 강화될 것이라고 언론에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자주 사용함으로써 일반화 되었다.

GR의 형성과 전개과정을 간단히 나타내 보면 그림 2와 같다.

여기에서 논의하고 있는 환경과 무역이라는 문제는 본질적으로 어느 것을 우선으로 볼 것이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즉, 순수한 환경보호의 차원에서 논의될 수도 있고, 환경규제에 따른 무역의 문제로 볼 수도 있다.

실제적으로 미국 내에서는 여러 집단들이 무역과 환경을 연계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환경단체들은 환경보호주의적 입장에서 무역조치의 채택을 모색하고 있으며, 업계, 노동조합 및 의회는 미국 산업의 국제경쟁력 및 시장점유율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간 환경기준의 차이를 이유로 한 일방적 무역조치의 사용을 옹호하고 있다.

환경보호주의와 경제보호주의가 결부되어 미국 내에서 일방적 무역제한 조치를 옹호하는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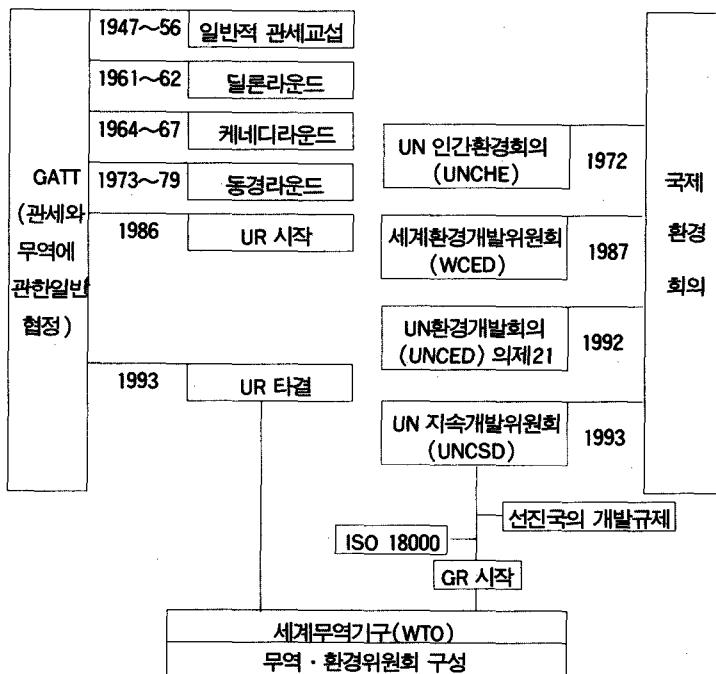
이러한 두가지 관점 때문에 무역과 환경의 연계문제는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다. 단순한 환경보호 차원이 아니라 정치적 문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환경정치"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논의의 중심 측은 역시 환경보호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972년 UN 인간환경회의에서부터 시작되 환경에 대한 인식은 1980년대에 고조되기 시작하여 1992년 리우UN 환경개발회의에서 그 꽃을 피웠다.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개념이 그 자리

〈특집 I〉 : 「그린라운드」와 原子力

그림 2 : GR의 형성과 전개과정



마라케쉬 UR 각료회의

무역과 환경에 대한 논의는 계속 있어 왔으나, GR이 하나의 국제적 규범으로서 논의되기 시작하는 시점은 얼마전에 열린 UR 각료회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UR 각료회의는 1994년 4월 12일부터 15일까지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세계 111개국에서 3,000여명의 대표와 1,000여명의 보도진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100여개국의 수석대표가 기조연설을 통해 새롭게 형성되는 국제 무역질서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각국 대표들은 새로 탄생하게 될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로의 이행에 필요한 준비위원회 설치를 비롯한 4개의 각료 결정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으며, UR 협상의 공식 종결과 WTO의 출범을 천명하는 '마라케쉬 각료선언'을 채택하였고, UR 최종의 정서와 WTO 설립협정 등에 대한 서명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각료회의는 UR 협상을 공식적으로 종결 짓고, WTO 체제로 나아가는 시발점을 마련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환경과 무역문제와 관련해서 이번 회의가 중요했던 이유는 이번 회의에서 앞으로 설립될 WTO 하에 무역환경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각료결정이 채택됨으로써 무역과 환경문제는 앞으로 WTO 체제 하에서 다루어 나가기로 확정되었다는 점이다.

를 완전히 잡기 시작하였고, 산성비, 지구온난화 등과 같은 지구환경문제에 전세계가 공통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인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국가는 이제 없다.

문제는 각 국가의 이해관계가 얹혀 있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이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는데 있다. 따라서 GR의 궁극적 목표는 이러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공통으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GR은 '하나 밖에 없는 지구를 살리자'는 명분하에 무역규제를 포함한 벌칙조항을 수반할 전망이어서 환경 초보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미숙하게 대응했다가는 치명적인 피해

를 입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점이 우리나라의 언론들이 GR을 부각시키고 있는 이유이다.

그러나 어차피 선진국들의 일방적인 환경 관련 무역조치가 이미 가동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문제가 다자간 협상체제로 전환된다는 것은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제적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이를 아직도 인식수준과 실천의지가 박약한 우리의 환경 수준을 높이고 기업들의 대외경쟁력을 증진시키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무역환경위원회는 앞으로 환경조치와 무역조치의 관계를 확인하고 다자간 무역체제의 공평하고 무차별적인 성격에 적합한지 등을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지금까지 환경협약 및 각 국가의 환경 관련 무역규제 조치는 국제 무역규범과는 별도로 환경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채택되어 왔으나, 이를 조치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제어(制御)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이었다.

따라서 이번 회의의 각료결정은 지금까지 국제교역 문제만을 다루어 왔던 GATT 체제가 WTO 체제로 확대

· 발전하면서, 무역상의 조치 뿐만 아니라 무역에 영향을 주는 환경 관련조치도 함께 검토대상으로 하고, 이를 위해 WTO 체제 내에 공식적인 메커니즘을 출범시킨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GR과 원자력

원자력이 GR과 연계되어 이야기될 수 있는 것은 원자력이 대기오염 및 지구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되기 때문이다.

원자력 발전은 화석연료에 의한 발전에 비해 대기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SOx나 NOx를 배출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산화탄소도 배출하지 않는다.

1992년 로마클럽보고서로 발간된 '제1차 지구혁명(The First Global Revolution)'에서도 원자력에 대해서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 밖에 없는 현 시대의 에너지 대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태양열, 풍력, 조력, 지열에너지 등을 대안으로 내세울 수는 있으나 현재의 개발 속도로 볼 때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공급할 수는 없을 것으로 이 보고서는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이에 따른 무역조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원자력을 주요한 대안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원자력계는 이점을 더욱 깊이 연구 분석하여 원자력이 필요하다는 홍보자료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원자력과 GR을 연계시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분야는 방사성폐기물의 환경안전관리 문제이다.

1992년 UN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 21」에서는 인간보건의 보호와 환경보전을 위해서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수송, 저장, 처분을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광범위한 종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규

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각국의 활동으로서, 관련 국제 기구와 협력하여 ①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정책 및 제도적 장치 마련, ② 방사성폐기물 안전기준, 지침 또는 시행규약을 제정·공표하는 IAEA의 활동 지원, ③ 방사성폐기물 관련 기술의 개도국 이전 촉진, ④ 방사성폐기물을 대한 환경영향 평가, 안전관리, 사고 대책을 위한 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이나 지역적으로 협력·조정해야 할 사항으로서, ① '방사성폐기물 越境 이동에 관한 규약 (Code of Practice on the International Transboundary Movement of Radioactive Waste)'의 시행 노력 강화와 문제점 검토, ② 방사성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하는 런던협약의 촉진, ③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과학적 확신이 없는 한 방사성폐기물의 임해 저장 및 처분 금지, ④ 방사성폐기물의 수출 금지, ⑤ 여타 지역적 환경협약 당사국들의 결정 존중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방사성폐기물 환경안전관리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개될지 우리가 관심을 두고 지켜 보아야 할 문제이다.